

제418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8 호
(정기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1월27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1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1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1

(10시06분 개의)

○소위원장 박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소위원장 박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렸던 예산안 감액에 대한 1차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쟁점적인 네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R&D나 펀드 문제, 이차보전 문제, ODA 사업 등에 대해서 큰 원칙을 가지고 양당 간사님이 진행을 해 주셨고요. 또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회의에서도 말씀드렸고 양당에서도 입장이 올해는 어려운 민생 등을 생각해서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치자 이런 의지들이 강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둘러서 이것들을 해내는 게 국민을 위해서, 또 우리가 국회에 대한 그동안의 관례로 계속적으로 연장하고 소소위나 2+2 또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왔던 것들을 한 번쯤

되돌아보고 고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님 힘드시겠지만 좀 더 속도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증액심사를 하는 이유 자체가 그동안에 국회가 가진 권한하에서 불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깎아 냄으로써 정말 더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는 그동안의 여러, 20대든 21대든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증액에 대한 의미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관례에 보면 저희가 예산 삭감이 한 4조 정도 보통적으로 예결위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그것에 해당하는 만큼 또 증액을 해 왔던 것이 이제까지의 예결위에 대한 관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정부와 여야가 합의하면서 증액안 또 감액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회의에서 증액에 관한 의견을 말씀하지 못하신 위원님들과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청취한 후 어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증액 필요 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끝으로 기획재정부의 답변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말씀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제에 이어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책 예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여당 위원님들이 일부 발언하셨고 야당 위원님들은 다 발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원하시는 것, 어제 놓쳤거나 또는 새로 추가되는 부분들에 대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제한은 없고 충분히 말씀하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 분 한 분 손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당 위원님들이 어제 못 하셨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하시겠습니다.

최형두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AI·디지털 자유무역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어제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매우 뜻깊은 법안 의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AI 기본법, 디지털포용법, 단통법같이 그동안 여야가 민생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힘을 모으자고 했던 법안을 오랜만에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의결했습니다.

저는 이 5개 주제 중에 방송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었다, 그래서 과학 혁신 생태계의 절규가 정말 들리지 않느냐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아울러서 어제 저희 당에서도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AI(인공지능)야말로 그리고 디지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서 또 산업화·정보화에 의해서 새로운 문명 전환기에 이 각박한 지정학의 각축 시대에 대한민국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나라로 거듭나고 더 강대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도 마침 이재명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고 우리 과방위의 예결소위 위원장

이신 정동영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AI 특위가 발족되었습니다. 여야 모두 AI를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자는 결의를 모아 가고 있습니다.

지금 AI가 기술을 넘어서 국가, 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시대적 전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방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중에서 탈탄소의 새로운 에너지, 예컨대 SMR·SFR 같은 이런 몇 가지 핵심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있고 또 예산 감액을 일방 처리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I 쪽 예산을 늘려서 우리가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해야 되고 지금 이 절박한 시간을 놓치면 뒤처지게 된다는 그런 큰 공감대를 확보했습니다.

2025년은 AI 인프라 조성의 핵심 연도로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AI 3대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미 국제전문기관은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의, 이른바 AI G3의 도약의 터전을 갖고 있다. 그것은 AI 반도체와 기술 능력 또 수많은 지적재산 능력 이런 것들을 판단으로 한 것인데 법제적인 뒷받침이 없었다, 그리고 또 정부 차원의 국가적 총력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들이 지금 전체 평가에서는 후순위로 가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급하게 여야가 과방위에서 AI 기본법을 통과시키게 된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이런 우리 결의와 달리 많이 늦어졌고 해서 AI 인프라, 즉 GPU를 비롯한 AI 컴퓨팅 인프라가 없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프라를 누가 얼마나 갖췄느냐, 그 컴퓨팅 능력을 얼마나 갖췄느냐에 따라서 AI 능력이 좌우되고 그것이 국가 순위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2025년은 AI 3대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의 AI 생활화, 또 각 산업 분야에 AI를 접목함으로써 산업구조를 개편하지 않으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AI 컴퓨팅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 핵심 기술개발과 인재 양성 같은 AI 혁신 생태계 구현을 위한 지원책이 절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어제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발족을 통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밝혔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위원장과 정동영 부위원장이 뜻을 같이했습니다.

어제 우리 당에서는 4조 원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로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고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그 시급성을 감안해서 센터 출범 전이라도 국가가 주도해서 GPU를 우선 구매해 제공해야 된다, 또 반도체 융자 프로그램 적용 대상에 GPU 구매를 포함시켜서 AI도 우리 전략산업으로서 세제 혜택과 국가적 지원 대책의 중요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것을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AI 전용 대출을 신설하여 투자를 촉진하도록 했습니다. 반도체산업 역시도 세액공제, 또 AI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인 반도체에 버금가는 세액공제를 추진함으로써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킬 계획도 밝혔습니다.

AI 경쟁력은 결국 인재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번 감액심사 때 상당 부분에서, 상임위 단계에서 민주당 야당 위원님들이 디지털교육 인재에 대해서 많은 감액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AI 경쟁력도 결국 디지털 인재, AI라는 것은 디지털 데이터의 어떤 데이터를 얼마나 좋게 확보하느냐에 달린 문제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공하고 이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는 인재의 수에 또한 AI 경쟁력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인재 육성에도 정부가 또 여야가 예산을 집중해서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계 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AXDX라고 하지 않습니까? AI 전환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 산업계가 AXDX를 하지 못하면 우리 국가 경쟁력도 떨어집니다. 때문에 생성형 AI와 AI 반도체 분야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최고 수준의 선진 연구자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려도 되지요?

○소위원장 박정 예.

○최형두 위원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바로 국가 AI 컴퓨팅 센터로 집약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디지털 인재 양성으로 집약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 문제에 한해서 이야기하자면요.

AI R&D 인프라의 핵심은 GPU 칩을 정부 예산으로 구입하거나 아니면 지금 바로 구입하지 못하면 임대를 해서 수요기업과 기관에 할당하는 그런 주요 사업입니다. 이미 과기장정통신부에서는 2025년 예산에 3217억 원의 배정을 요청했습니다. 과기장정부가 제안한 사업 내용은 민간 임차와 정부 구매인데 여기에 또한 대학에, 왜냐하면 혁신 생태계의 중심이 대학에, 특히 지역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 이미 연구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 대학에 AI 컴퓨팅 랩을 구축·지원해야 됩니다. 이것을 구축·지원하지 않으면 지역균형발전, 지금 이미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수도권 집중화로써 인구소멸의 위기에 크게 고통받고 있는 지역이 AI 시대에 제도약할 길이 막히게 됩니다. 때문에 지역의 대학에 AI 컴퓨팅 랩, 이것은 물론 수도권 대학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은 비교적 컴퓨팅 랩이 다양하게 기업과 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지역은 대학의 AI 컴퓨팅 랩 구축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증액사업으로 추가된 대학 AI 컴퓨팅 랩 구축 지원 항목에 보다 우리 여야 간사님과 정부에서 좀 더 주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초거대 AI, 즉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는 하나에 최소 3조가 듭니다. 3조 원이 들고 완공까지는 3년이 소요되어서 특히 초거대 제조 AI R&D와 생태계 조성에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체는 곧 우리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대학에 GPU, 즉 엔비디아 H100이라고 합니다. 또는 구글의 TPU, 이게 여덟 장 한 조에 50세트 규모인데 시가가 약 200억입니다. 이런 단위로 AI 컴퓨팅 랩을 구축하는 사업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적인 AI G3 강국 도약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당장 예컨대 이런 사업이 확보되면 정부예산으로 먼저, 우리가 이미 GPU를 사기는 늦었습니다. 그러나 구글클라우드코리아가 보유한 H100 약 900장 가운데 800장을, 이걸 여덟 장이 한 세트기 때문에 100세트입니다. 100세트를 먼저 구입하고 임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이런 구글클라우드코리아 또는 국내의 큰 클라우드 회사인 메가존클라우드 다음에 전사적 자원관리 ERP로 유명한 에스에이피코리아 등과 협업해서 국내 최초의 제조 AI 컴퓨팅 랩을 구축해서 초거대 제조 AI 사업을 뒷받침합니다.

이미 LLM에서는 우리나라가 많이 뒤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주목해야 될 것은 LLM과 함께 LAM, 결국 초거대 제조 AI, 지금 전 세계에 K-방산이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만 제조 강국으로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나라는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LLM에서는 많이 뒤졌지만, 즉 초거대 언어모델은 많이 뒤쳐져서 초거대 제조모델로는 세계 정상으로 리드하기 어렵지만 초거대 제조 AI 모델, 이 모델로는 전 세계에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산업화에 성공해서 전 세계적인 제조 국가가 된 대한민국이 계속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나라, 꼭 필요한 나라가 될 수 있는 필수 사업입니다.

AI, 특히 초거대 제조 AI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 최초의 제조 AI 컴퓨팅 랩 사업에 정부와 여야가 예산 사업에 같이 좀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과방위에서 받았는데 이미 광주에도 AI데이터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이기도 했고 그랬는데 지금 광주에는 AI데이터센터가 원래 2003년 초에 마무리되었어야 되는데 2003년 초에 2단계 사업 예타가 신청되고 이게 열개를 잡아 가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시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이견을 보여서 예타가 올해 하반기에 신청되었고 이 때문에 사업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야는 초당파적으로, 특히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했고 광주가 AI 데이터 사업에 크게 관심을 보여 주고 있는 만큼 과방위 예산소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많은 사업 때문에 저희들은 동의하지 않았습시다만 과방위 예산소위가 또 전체회의에서 900억으로 증액되어 지금 예결위로 송부된 광주AI데이터센터 사업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초거대 AI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역량이 시급합니다. 이것은 NIPA 공모 사업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초거대 제조 글로벌 컨소시엄 같은 곳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아주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또 NIA 사업으로 가이아-X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EU의 데이터플랫폼 프로젝트입니다. 간곡히 전액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NIA 사업으로 전국 10개소의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이오·AI R&D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 AI 반도체 실증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국산 NPU, 퓨리오사·리벨리온·사피온 같은 국산 NPU 개발사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리고 트랙레코드를 확보하기 위한 계속사업입니다. 증액을 꼭 요청드립니다.

K-미디어 AI 전환 사업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이것은 네트워크정책실 사업인데 우리 방송사의 미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정말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민주당도 과방위에서 다 동의한 사업이니깐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이것 우리 AI가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제 오늘 발언에 우리 과방위 여야 위원들이 전부 목을 매고 있습니다. 관심 기울여

주십시오.

국가AI위원회 발족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정부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는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시도 운영 지원에 대한 예결위의 관심이 절박합니다.

이게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AI 연구용 컴퓨팅 지원, 제가 다시 강조드리지만 지금 GPU칩을 구하느냐 안 구하느냐에 국가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도 이미 예산을 배정했습니다만, 특히 지금 당장 우리가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확보하고 있는 GPU를 먼저 구매하거나 임대함으로써 우리가 GPU 능력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꼭 부탁드립니다. 그 사업은 AI연구용 컴퓨팅 지원 프로젝트 항목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AX 실증밸리 조성사업, 이것 광주AI데이터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저희 국민의힘 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민주당과 함께, 특히 조인철 의원이 과방위에 서 간절히 원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여야 위원이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거대 제조 AI 기반 클라우드서비스 개발 역량지원 역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 없이는 AI가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커뮤니티 육성과 글로벌 데이터 협력 지원 사업, AI 혁신을 위한 민관 협력 데이터 안전 활용 생태계 조성, AI 반도체 실증 지원, K-미디어 AI 지원,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 지원,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야 간사님과 예산실에도 간곡히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 운명이 걸린 문제기도 합니다. 골든타임에 관한 문제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정학의 갈등 속에서, 전 세계적인 새로운 질서가 재편이 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지난 70년간 성공의 길로 기적을 이루어 왔지만 그 기적을 다시 다지고 AI 시대에 한 번 더 국가를 도약시킬 수 있는 정말 운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정 다 하셨습니까?

○최형두 위원 더 해도 됩니까?

○소위원장 박정 예, 더 하셔도 되고…… 한 바퀴 돌고 또 필요하면 하시고요.

○최형두 위원 예.

○소위원장 박정 마포에 만들어지는 데이터센터인가요?

○최형두 위원 아닙니다. 창원 국가산단……

○소위원장 박정 아, 마산합포…… 광주는 직접 말씀하시면서 안 해서……

다음은 최은석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오늘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와서 살을 붙이면 한 2시간 정도 할 수 있는데……

○소위원장 박정 2시간?

○최은석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 그러면 오후에 2시간 드릴게요.

○최은석 위원 이번에 감액심사할 때 주로 많이 얘기됐던 것들이라 제가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2025년 예산이 민생이라고 하는 관점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나 약자 보호나 지역균형발전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빠듯한 나라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고 기획재정부가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듣고 부처하고 협의를 잘 거쳐서 그나마 최선의 최선이라는 말은 좀…… 어쨌든 최선의 또 최적의 예산을 도출했다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죽 보니까 아마 정부도 되게 고심이 많았던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번에 죽 논의되면서 일부 감액이 주장되고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꼭 감액 의견이 없더라도 증액이나 이런 게 좀 더 감안되어야 될 것 같은 것들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또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자영업 산업계 여기를 좀 고도화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정부에서 조사해 봤을 때 배달비하고 택배비가 각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되게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거기에 관련된 논란이 많았지만 이 부분이 물론 글로벌 플랫폼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것들도 있지만 그게 결국 배달라이더로도 많이 가는 것하고 또 정부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지금 어쩔 수 없이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배달·택배비에 대한 지원을 필요하면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점프 업하는 것 관련해서 100개 정도 내년도에 일단 시범사업 하는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되게 도전적인 상황입니다. 상황이어서, 히든 챔피언 같은 이런 중견기업들이 앞으로 활성화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근간을 탄탄하게 받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중견기업의 육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이 중소기업들을 중견기업으로 점프 업하기 위한 스케일 업 사업, 거기에 지원하는 것들을 필요하면 100개에서 조금 더 늘리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지류)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았으니까 카드하고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증액해서 우리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게 지금 어려운 지방경제에 그나마 온기를 돌게 할 수 있는 빠른 길이 아닐까 싶어서 카드와 모바일에 온누리상품권을 좀 더 증액하는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출발기금과 여러 가지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확대를 통해서 저는 자영업 구조를 빨리 선진화하고, 예를 들면 자영업자분들이 이렇게 몇 분이서 사업을 통합해 가지고 협동조합 형태로 하든지 해서 자영업도 규모가 조금 더 커지고 그래서 자영업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거기서 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또 기존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좋은 일자리로, 임금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새출발기금의 확대도 정부안보다 좀 더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농축산업, 어업이 되게 어려운데 고부가산업으로의 농축산업 구조 전환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스마트팜 관련된, 물론 이게 사례기는 한데 스마트팜을 통해서 쌀농사에 편중된 우리나라의 농업 구조를 좀 더 고부가작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스마트팜에서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스마트팜의 작물들을 찾고 빨리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스마트팜에 관련된 산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K-푸드 정책과 연계해서 농업이나 축산, 어업의 농산물, 축산물 그다음에 수산물에 대해서 글로벌하게 수출 지원하는 것, 요즘 한국의 쌀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굉장히 호평이고 우리나라의 과일들이나 이런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것들의 수출 지원 확대도 앞으로 농축산어업의 구조를 좀 더 고부가가치로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아닌가 해서 수출 지원 확대 예산을 좀 더 증액하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에 관련해서 R&D 예산에 대해서, 물론 일부 복원은 됐는데 저는 그 복원된 것 중에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다음에 글로벌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 또는 핵심 기술에 조금 더 선택과 집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그 부분 필요하면 좀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3대 게임체인저라고 해서 AI, 바이오, 양자 했고 초격차 선도기술에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통신, 차세대 원전, 우주, 수소, 사이버보안 했는데 초격차 선도기술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경쟁력 갖고 있는 것은 아마 일부 첨단 디스플레이고 나머지 디스플레이들은 이미 중국한테 경쟁력이 다 따라잡혀서 정부에서 R&D 예산을 투입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지금 화학에서 우리가 그런 것 좀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에틸렌 금액, 그것 지금 완전히 다 떨어져서 국내 화학업체가 중국 업체에 다 따라잡혔는데요. 이게 중국 업체에 결국은 기술을 빠른 시간 내에 넘겨줄 수밖에 없는 산업들은 정부가 한번 검토를 해서 정부 핵심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하고 그 분야에는 좀 더 증액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 우주라고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미국 그다음에 중국 같은 이런 우주기술을 빨리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R&D와 관련해서 또 중요한 게 우리나라의 핵심 인재인데, 지금 젊은 과학자들이 국내를 자꾸 떠나고, 또 해외로 나갔던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력들이 국내로 다시 복귀하지 않고 미국이나 선진국으로, 그냥 거기서 거주하면서 눌러사는 현상들이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어서 저는 이런 젊은 과학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또 취업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인센티브나 정부예산을 통해서 핵심 인재들을 국내에 잘 잡아 둘 수 있는…… ‘잡아 둘 수 있는’ 표현을 정정하겠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내 산업이나 국내 창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 인재, 젊은 핵심기술 인재에 대해서는 좀 더 처우나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산업으로 ABC+라고 정부에서 했는데, 아까 R&D랑 좀 겹치는데 AI하고 바이오·반도체 산업 그리고 국가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지원 규모 확대를 통해서 이 산업들이 글로벌 경쟁 우위를 좀 더 조기에 달성하고 그다음에 경쟁국들과 격차를 최소한 뛰어넘거나 격차를 벌릴 수 있도록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 외에도 원전하고 방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우리나라의 먹거리 산업으로 아주 중요하게 저희가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경쟁국들과 격차를 벌릴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전과

방산이 앞으로 좀 더 고부가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증액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또 말씀드렸는데 우리 K-문화 영토 확장과 관련해서 K-콘텐츠나 K-푸드, K-뷰티, K-리퀴라고 해서 우리나라 전통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K-콘텐츠 펀드 출자 같은 것들 이번에도 논란이 좀 많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정부안도 되게 모자라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영화나 드라마 음악 말고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것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창작력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산업으로 빨리 전환하고 그 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제조업 수출 말고 문화산업의 수출을 통한 어떤 국부 창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끼를 빨리 이렇게 산업으로 전환해서 이런 문화산업을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는 K-콘텐츠 펀드 출자 같은 것들은 오히려 정부안보다 좀 더 증액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콘텐츠 말고도 K-푸드나 K-뷰티나 K-리퀴 같은 데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확장적인 그런 정책들을 찾고 지원을 확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 영토가 확장되면 결국 같이 따라오는 게 국력이 상승되고,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제조업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조업에도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걸쳐, 콘텐츠와 푸드, 뷰티, 리퀴 같은 이런 K-문화 산업에 대한 정부 증액이 정말로 좀 더 이렇게, 아주 좀 뭔가 확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들의 스타트업 창업 지원 확대에 대해서 도전이나 혁신하는 그런 기업가 마인드를 가진 젊은 층에게 창업을 할 수 있고 이 창업한 회사들이 글로벌에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증액이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벤처 펀드 확대하고 그다음에 창업 허브를 조성해서 우리 젊은 스타트업 기업가들이 마음껏 창업하고 또 글로벌로 나갈 수 있고 또 같이 모여서 좀 더 새로운 어떤 융합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허브 같은 것들, 이런 데 대한 예산은 좀 더 아낌없이 증액을 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어떤 미래 먹거리에 시딩(seeding), 씨를 뿌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이 저는 되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약자 보호 관점에서 보면 필수의료 확충하고 그다음에 지역보건의료 관련해서 차질 없도록 이번에 수립돼 있는 의료개혁 예산이 차질 없이 잘 반영되고 필요하다면 좀 더 증액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제가 어제 쪽 보다 보니까 이게 질병청하고 국방부에 포함이 돼 있던데 두창 백신 같은 경우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재고들이 지금 다수 있나 봅니다.

이게 아마 국방부는 우리 군인들을 위한 백신인 것 같고 질병청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핵심, 필수 백신 같은 게 유통기한이 지난 재고가 다수 있고 이런 것들은 저는 오히려 이게 전 국민의 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이 유사시에 백신 같은 것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왜 정부 원안이 이렇게 깎였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이런 백신이나 국민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예산 논의 단계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정부에서 챙겨 봐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다시 복원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0대 이상 중년층, 노인층이라는 말은 이제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60대 이상의 중년층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 이 부분은 저는 증액이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감에서도 지금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노인 기준을 상향하자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노인이라고 부르기도,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중에도 아마 만 65세 되신 분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 65세는 거의 청년입니다. 그래서 60세, 65세부터 복지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고 복지 비용이 급속히 증가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65세로 되어 있는 노인 기준을 빨리 상향해서 오히려 정부에서 좋은 일자리, 그동안의 사회 경험에서 얻은 좋은 경험을 다시 사회로 환원하기 위한 60대 이상의 중년층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 확대에 예산 투입이 좀 더 많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제 전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약자 보호 관점에서 LH 영구임대아파트 내의 노후 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제가 대구의 제 지역구에 가 보면 특히 노인분들, 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이 정말 열악한 데가 많은데 특히 영구임대아파트라 그러면 서민들이 살아가시는 데인데 그 안에 있는 노후 복지관이면 어르신들에 대한 꼼꼼한 보살핌 이런 게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그런 사업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LH 영구임대아파트의 노후 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이런 부분들도 정부에서 다시 한번 봐서 좀 더 증액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 전체의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마약이나 담배이크,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도박 등 이런 부분은 저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정말 중범죄고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서 재발방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데에 대한 예산, 이것은 각 부처의 특수업무경비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데에 대해서 수사하고 그다음에 뿌리 뽑고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 예산 증액이 정말로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는 장차관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말씀드렸는데 실은 좀 더 필요한 게 저연차 공무원들부터 전반적인 공무원 전체의 급여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 7급·9급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도 많이 떨어지고 제가 이번에 국감할 때 보니까 7급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신입사원들 급여의 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연차 공무원들부터 장차관, 고위직 공무원들까지 처우 개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근에 싱가포르 글로벌 경쟁력이, 거의 최고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가가 됐는데요. 싱가포르의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많겠지만 저는 공무원들에 대한 우대와 민간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어서 우수 인재들이 공직으로 유입되는 시스템이 우리가 벤치마킹할 좋은 정책이 아닌가 싶고 그런 의미에서 저연차 공무원들과 장차관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획기적으로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제가 조금 이것은 시간이 가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업무 협의차 싱가포르에 있는 어떤 기업 CEO를 만났는데 이분이 전직 장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직 장관일 때 어

됐느냐, 급여가 많이 느꼈겠네요?’ 하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급여가 똑같대요. 그래서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꽤 오래,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싱가포르의 장관 급여가 싱가포르 달러로 80만 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아마 1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어야 민간에 있는 좋은 자원들이 정부로도 가고 또 정부에 계시던 분들이 민간으로도 오며 가며 서로의 장점들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문화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 제가 그때 싱가포르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 공직에 대한 처우 획기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이번에 장차관님들 급여 동결에 대해서는 정말 간곡하게 다시 한번 그 의견을 철회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짜 젊은 직원들이 그런 것 보면 공직에, 내가 잘해서 차관·장관 돼 봐야 맨날 월급 깎이고 동결되고 하는 것들이 주는 공직에 대한 뭐랄까, 걱정 이런 것들……

○허영 위원 서면으로 대체하시지요.

○최은석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비비가 정말 이번에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이 기재위에서 하신 말씀 저도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저는 25년도에 우리나라 경제로 보면 지난 역대 정권에서 보기 어려웠던 불확실성의 시기 같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의 시기에는 정부에 탄력적인 정책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재량을 좀 많이 부여해 주시는 게 좋은 게 요즘 민간에서는 1년짜리 경영계획 수립 잘 안 합니다. 그래서 1년 예산이라고 하는 게 정부가 1년 전에 25년의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 상황 같은 걸 예상해서 예산편성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번에 트럼프가 이미 중국하고 멕시코, 캐나다에 관세 당장 인상하는 것 보면, 만약에 내년에 중국에 대한 60% 관세 도입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처지에 처할지 되게 암울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정부가 이 예비비를 가지고 다양하게 탄력적으로 우리나라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해서 그런 불확실성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비에 대해서도 원안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두 시간짜리를 한 20분 정도에 마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 1시간 40분은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의 재정 원칙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증액을 원하시는 부분들이 많고 실제로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지금은 삭감이 이루어지는 부분만 증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과 증액을 잘 맞춰 주는 게 진짜 어렵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전체적인 기조 변화 또는 지금 우리 예산안 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에서 나왔다는 추경을 통해서, AI 같은 건 우리가 정말 혁신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박수민 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박수민 위원 저는 어제 생각보다 길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주려 보니까 어제 얘기한 것 포함해서 일단 1번이 새출발기금입니다.

이 새출발기금은 지금 좀 늘려야 됩니다. 이걸 늘려서 연체자뿐 아니라 직업 전환과 연계해서 고용노동부랑 일을 같이 하든 아니면 새출발기금 내에서 직업교육을 연계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걸 증강하든 자영업자분들 빨리 직업 전환하는 것은, 이것은 하루라도 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스타트업입니다.

우리나라 수출과 내수가 지금 분리되고 있는데 수출산업이 없어진다면 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수출은 수출대로 잘 글로벌화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산업들이 가도록 해야 되고, 결국 여기서 새로운 씨앗이 자라야 젊은이들이 여기서 열정을 갖고 일하고 이것은 다 내수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가는 한국 모태펀드 예산인데 이것은 좀 늘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이 사회복지 전달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던 말일 거예요. 아마 제가 만들어 낸 조어일 건데, 사회복지 전달체계라는 얘기도 있었고 사회복지 예산도 있었는데 사회복지 전달비용이라는 말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늘어나는데 그걸 전달하는 종사자들, 복지원 또 복지 공무원들 이 부분 처우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일거리가 너무 많고 이것 역시 완벽하게 내수로 전환되는 증액입니다.

그다음은 군대인데요.

저는 사병 월급 205만 원 어차피 정부가 추진하니까 지지합니다마는 사병에서부터 퇴역까지 전체적으로 체계를 좀 봐야 될 때가 됐고, 지금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군대가 옛날에 저희가 흔히 얘기하던 60만 대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제가 보니까 이미 한 40만 정도로 내려왔는데 이제 한 30만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사병부터 퇴역까지 군이 명예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처우를 꼭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증액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군도 작지만 강한 군이면서 또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젊은이들이 새로운 일자리 만들 수 있고 이것도 100% 내수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새출발기금, 스타트업, 사회복지 전달비용, 군, 이게 제가 생각한, 이제 저희가 좀 증액했을 때 신속히 내수에도 도움이 되면서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될 일들 그렇게 봤고.

하나 더, 저출산 대응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관찰하기에는, 평가하기에는 정부의 저출산대응기획부가 아직 출범 안 해서 그런지 전략이 잘 안 보입니다. 아직은 잘 안 보이지만, 이 부분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증액을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이긴 합니다마는 저는 결국은 수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개선은 저희가 다양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양육비를 도와주는 수당의 문제가 있다, 일단 문제 제기만 하겠습니다. 이 다섯가지가 제가 얘기한 내수에 대한 얘기고요.

수출은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은 전통 대기업들이 잘하고 있고 글로벌하게 자금의 압박도 없이 잘 세계화하고 있고 미국에서 보조금까지 주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은 것 같고 그들한테 맡기면 될 것 같고, M&A나 구조조정이 잘 일어날 수 있게 시장이 대비만 하면 될 것 같고.

저희 공공 부문에서 하나 준비해야 될 거는 원전하고 방산 수출을 위해서는 무역금융이든 신용보증이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든 필요할 텐데 저는 이 부분에 정부가 돈을 좀 쓸 필요는 있다 해서…… 지금은 아직 수출입은행 출자밖에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그래서 수출입은행 출자가 있는데 그걸 좀 더 늘리든지 아니면 지금 규모가

적정한지 판단해서 원전과 방산 이쪽에는 정부가 수출산업을 도와줄 역할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크게 5+1입니다. 내수 다섯 가지 더하기 수출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정 어제 간사님이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구자근 간사님 하시고 엄태영 위원님 오늘 안 하시면 다음 순서로 꼭 이렇게……

김태선 위원님 하실 거예요?

○김태선 위원 아니요, 안 할 겁니다.

○소위원장 박정 안 하시고, 그러면 안도걸 위원님 거꾸로 이렇게 오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중물 역할도 해야 하고 또 민생과 미래도 챙겨야 하고 특히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을 꼼꼼히 챙겨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우려했던 것은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은 서면질의를 통해서 전부 다 제기되었다는 말씀과 또 간사 간 협의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카운팅을 해 보니까 증액사업이 한 200건 정도 확인이 됩니다. 모두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통하거나 그런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가 담긴 사업들을 정부가 명심해 줬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예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높은 투자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선 장애인부모연대와 제가 최근 면담을 한번 해 봤는데 자립 지원 활동 서비스 등 지원할 사업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부터 24시간 개별 일대일 돌봄 지원 등 수요 대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되었고 관련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최중증장애인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도 증액이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또 의료계와도 면담을 했었는데 장애인 환자의 치과 진료, 생각도 못했습니다마는 장애인 환자분들의 치과 진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진료센터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들이 의료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치과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센터가 아니면 쉽지 않다는 그런 디테일한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각장애인들 점자 교육이나 정보화 사업도 시청각장애인들의 일상생활과 정보활동을 돕기 위해 필수적인 것 같고, 미래에는 물론 AI 로봇기술이 활발히 이용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만 고령자나 장애인 등 수요자 중심의 돌봄로봇 개발도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고령사회가 되면서 노인 일자리도 무척 중요한데 대한노인회 전국 각 지역에 보면 취업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지원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엄태영 위원님 계시지만 충북의 의료비후불제 국가지원 시범사업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 사업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에 일인당 300만 원을 먼저 의료비로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적극 육성해서 전국 단위 사업으로 키울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양극화가 사회적으로 참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희망사다리 장학금 사업이나 노무제공자 스텝 업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해 보이고 또한 저소득 청년들이 보험을 잘 들지 못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해나 손해보험비를 지원하는 등 청년안심보험 등의 사업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런 역할을 하겠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서 저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왔습니다만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예우 강화도 예산이 대폭 증액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생존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 단가 인상과 보훈의료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6·25 참전이나 월남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을 보면,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올렸습시다만, 정부안에서도 내년 수당을 42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높이고 있으나 지금 우리 국민들 일인당 최저생계비가 한 백이삼십만 원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이고, 또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수급 대상자들이, 6·25 참전이나 월남 참전자분들 연세가 연로합니다. 그래서 수급 대상자분들이 매년 줄어들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줄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정 여력들을 조금 더 융통적으로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재향군인 측도 만나 봤습시다만 보훈기금에서 지원받는 제도가 금년 말로 종료가 된답니다. 그래서 보훈기금에서 편성된 부분들을 정무위에서 보니까 일반세출로 돌렸는데 아직까지 보류되었습시다만 이런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항상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소방·경찰공무원분들에 대해서도 순직유족연금 확대 및 위험수당 상향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더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각종 마약범죄와 신종 사기 등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예산도 증액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도 간담회를 가졌는데 딥페이크 성범죄 부분에 관해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 강화 부탁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중앙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별 상담소도 더 내실 있게 운영해 줬으면 하는 그런,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대책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매우 필요해 보이고 또 추가 매입, 임대 공급이 좀 필요해 보이고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연장을 위한 증액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사회 통합과 국민 화합을 위한 종교계의 건의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종교계 가리지 않고, 기독교·불교를 가리지 않고 예산 건의를 들었습니다마는 공통적으로 걱정하시는 것이 저출생과 경쟁사회 또 자살률이나 마약 위기 등 이런 것

들이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소년 월드캠프나 선명상센터 등 국민 정신건강과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 문제들로부터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캠페인과 각종 사업들도 제안합니다.

7대 종교 분야에서의 사회 통합 행사 증액 건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국민 화합을 위해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도 많이 늘릴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소부장과 중소·중견기업들 투자보조금 사업이 있는데 산업 현장에서 수요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니 적극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차전지나 특화단지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도 부탁해야 되고 민간 투자분들의 적기 투자를 위해서도 반도체 관련해서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이를 위한 국가 전력망 확충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서, AI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중언부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면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할 때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만 12세 이하로 확대가 시급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가 7월 달에 발표했습니다만 소상공인 25조 원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명절 기간 동안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해서 전통시장의 소상공인 매출 신장에 좀 기여를 해야 할 것 같고 청년 소상공인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 폐업자 전용 취업 지원 트랙도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이 많이 부족한데 건설 투자 부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SOC 부분이. 그래서 SOC 같은 건설투자 부분은 고용 인력도 많고 지역경제 순환 효과도 크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매우 효과적인 분야라고 보여집니다. 전국적으로 우선 동시 착공이 가능하면서도 국민 보위에 기여할 수 있는 안전 SOC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노후화된 지방산단의 교량이나 도로 사업 등 산단 인프라 시설 확충과 또 지하철 사업이나 하수도 등 국비를 빠르게 투입해서 수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OECD의 2배 수준의 보행자 사고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 보행자 가드레일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해 보이고 서민들의 각종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서도 재개발 사업 등 이런 부분들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정말 많은 분야, 많은 민생 사업들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다 언급하기 어려운 점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미처 언급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도 허영 간사님과 함께 또 그리고 정부와 함께 꼼꼼히 살피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도걸 위원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존경하는 구자근 간사님께서 증액이 필요한 사업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 담자고 보면 아마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될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많고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재 내년 예산안이 그것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증액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증액 논의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정부의 입장이 뭔지 내가 조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비서실발로 해서 내년 초 추경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추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재정지출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굳이 내년 초에 한다는 것도 어색하고 지금 정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이 단계에서 그것을 반영하는 게 맞는 수순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차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기재부차관입니다.

방금 안도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대통령실 관계자발로 내년 초 추경한다는 부분이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 대통령실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년 초에 추경 검토한 바도 없고 현재로서 할 계획이 없다는 바를, 저희가 공식적으로 부인한 바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경을 하겠다는 말은 재정 정책에 대해서 조금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정긴축 그리고 부자감세 이게 대표적으로 지금 정책의 두 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두 축을 가지고 지금의 어떤 경제적인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것은 여기 계신 여당 위원님들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 의식에서 저는 그 이야기도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연초에 추경이라는 게 굉장히 어색하지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성급한 입장 표명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여하튼 내년도 경제 상황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적인 합의가 이미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내년도 본예산 증액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가 좀 전향적인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좀 서설이었고요. 제가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어제 복지에 관해서 말씀을 올렸는데 일부 좀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조금만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지금 장애인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 그리고 중증장애인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특히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법 개정을 통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위상이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장애인들이 단순히 보호받는 대상에서 자립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그러한 정책 방향이 수립이 됐다. 그래서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활동,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라든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지원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또 관련해서 중앙사회서비스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여러 가지 사회복지

지시설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복지시설의 서비스 질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정 지원…… 그런데 제가 구체적인 내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미 전달됐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양육비이행관리원 관련해서 선지급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선지급 지급 대상 기준이 이번에 중위소득 150%로 확대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확대 기준에 따르면 지금 반영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급 대상을 다시 한번 정확히 살펴보고 지원 금액을 좀 늘려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또 이게 양육비 분쟁에 관해 가지고 제대로 신속하게 정리가 되려고 하면 거기 계시는 변호사님들이 사안을 잘 헤아려 가지고 빨리 결론을 내려 줘야 한다고 하네요, 정확한 결론을.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워낙 처우가 낮아 가지고 이직이 너무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약직 변호사를 고용을 한다든지 임시방편으로 하는 이러한 요청이 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 대해 말씀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아까 최형두 위원님께서 AI 산업의 중요성 말씀하셨습니다. 100%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여하튼 이쪽 분야에서 우리가 앞서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 조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공유데이터처리센터 대규모 고성능 컴퓨팅 자원 활용을 특히 중소기업들이 쉽게, 좀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진 게 광주의 빅데이터처리센터 아니겠습니까? 엔비디아 기반의 GPU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처리센터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광주를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지정을 하면서 그 인프라가 구축이 됐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처리센터를 잘 활용을 해서 AI 쪽의 전문 기업들을 많이 육성을 시켜 나가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AI 전문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연산 비용이지요, 그것을 지금 계속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내용이 2단계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예타 면제를 하시고 이에 대한 총사업비 그리고 내년도 예산 산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지원 서비스가 계속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요를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또 몇 가지 민생 지원 관련 사업을 조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화폐 예산입니다.

지역상권을 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저는 지역화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금 보급하려고 하고 그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온누리상품권 역시 나름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프라를 우리가 비교를 해 본다면 지역화폐에 지금 가입돼 있는 가맹점 수가 전국에 266만 개예요. 온누리상품권은 지금 14만 개소거든요. 그리고 시장 규모를 보더라도 지금 지역화폐가 21조 정도 됩니다.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지금 정부가 수요처를 좀 늘리려고 해요. 그래도 지금 5조…… 아마 4조,

5조 하는데 그게 금년 실적 보면 한 3조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활용도를 보고 또 향후에 확대 가능성을 본다면 지역화폐가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이념이라든지 어느 특정 정당의 간판 사업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실용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지역화폐가 제대로 좀 발행돼서 지역상권이 살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저거밖에 없어요. 발행 비용을 할인해 주는 거지요. 할인하는 발행 비용을 주는데 어느 정도 비율로 줄 거냐, 우리가 가장 많이 줬을 때 코로나 위기 때 10%까지 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에 준하는 발행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을 해서 지역화폐가 활성화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온누리상품권도 있잖아요.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각자의 특장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에서 지역화폐 역시 발행 비용을 대폭 지원을 해서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정부가 좀 결단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 심각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산부인과가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애를 분만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가임 여성의 어떤 사전 진료도 좀 어렵고 한테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나름 지자체 간에 연대를 해 가지고 좋은 서비스를 하나 지금 발굴을 해서 이번에 정부에 올렸더라고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좀 봐 주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담양, 순창, 구례, 3개 군이 있는데 거기야말로 굉장히 산악·오지 지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료 이동버스를 같이 운영을 해서 가임 여성분들 포함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 등 해서 긴급한 환자들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운송 수단을 제공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농축산 분야를 우리가 굉장히 고부가가치화시키는 예산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팜 분야는 상당 부분 진척이 이루어졌는데요. 축산 분야도 스마트화할 수 있는 그런 단지 조성들이 지금 예산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범적으로 몇 개소는 운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수산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기후 환경 변화로 인해 가지고 수온이 올라 가지고 어장의 이동이 지금 되고 있고 녹조 현상 등 해양 오염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산물의 안보 차원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우리 국민들이 아주 범용적으로 드시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이제 스마트 양식을 지금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최초로 스마트 양식 시범단지 아마 제안이 지금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 수고하셨습니다.

장철민 위원님 안 하시고, 윤준병 위원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서론은 생략하고요 어제에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액심사하면서도 농어촌의 빈집 정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농어촌의 빈집 정비와 관련된 예산들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식품부, 해수부 이렇게 나뉘어 각기 단위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도 강화하면서 소요되는 예산들이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했으면 좋겠고, 제도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농어촌정비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만들어서 정부가 조금 의지를 가지고 대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5년도 예산 과정에서 빈집 정비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잘 챙겨서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또 탄소중립 사회를 내다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내용이 산림자원입니다.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산불을 제대로 제어하려면 임도 확충이 중요한데 임도 확충과 관련된 내용들을 실효적으로 예산에서 좀 뒷받침해 주는 이런 계기가 2025년도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또 노인복지와 관련된 내용들도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정부에서도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게 경로당에 주 5일 급식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급식비나 연료비 관련된 내용을 증액하고 또 실제 부식비와 관련해서도 입법적인 내용이 있어서 이것은 2026년부터 시행한다고 지금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이미 발표된 현 정부의 공약인 만큼 실효적으로 농촌에서도 경로당 어르신들의 복지가 증진될 수 있는 단위사업으로 커 갈 수 있도록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을 하면서 잘하고 있는 정책은 제대로 지원도 하고 진작도 시키고 잘못된 내용은 조정도 하고 또 삭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하고 있는 사업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예 사업 자체를 중단시키거나 이런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농업 분야에서 농지연금제도인데 농지연금과 관련해서 인기가 많다 보니까, 특히 수시인출형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수요가 많다 그래서 아예 가입 자체를 중단시키거나 신청 자체를 중단시키는 사례가 한 2년 이상 반복돼 왔습니다. 2025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적인 뒷받침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취약계층하고 농식품의 소비하고 연계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증액을 해서 취약계층의 보호와 함께 농식품의 소비도 진작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최근 쌀값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어제는 사전적 생산 조정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과 관련된 예산 증액이 반드시 실효적인 수준으로 증액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수적으로 실제 쌀값이 하락했을 때 공급량, 정부비축미로 하고 있는 내용이 연 한 40만t 내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가지고는 실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워서 내년도 예산에 5만t 정도를 좀 더 추가적으로 하면, 이 부분은 예산 투자가 실제 이루어질지 여부는 좀 가서 봐야 되지만 그러나 예산에 담겼다는 내용만으로도 시장의 순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개식용 종식 폐업·전업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일차적으로 예산에는 담겼습니다만 폐업이행촉진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이 사실상 이행촉진지원금이 아니고 페널티 형태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고 또 지원 구간과 관련돼서 실효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구간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느냐, 지원 단가는 적정하냐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실제 농해수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서 증액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이 반영되면 개식용 종식 폐업·전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꽤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제대로 검토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진작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실제 농업기계와 관련된 지원 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재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게, 보조금을 통해서 장비 구입하는 데 지원이 되면 그 보조금이 되었다는 내용 때문에 이중가격이 형성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편에서는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입법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도, 정부 지원 확인서가 뒷받침되는 내용의 경우에는 확인서가 지원되면 오히려 보조금만큼 가격이 인상돼서 이중가격이 형성되는 사례가 왕왕 있어서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점점이 필요하고.

이와 연계해서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과 관련된 예산도 적기에 하는 것이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고 또 도시뿐만이 아니고 농어촌의 교통이나 미관에도 기여할 수 있어서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과 관련된 사업도 한번 제대로 챙겨 봐 주기를 희망합니다.

또 어업과 관련해서 어업 지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중국 어선의 침범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은 대형 어업지도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900만t급 어업지도선 건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공정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예산 관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연근해 어선과 관련해서 감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실효적인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인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진도가 제대로 나가지 않는,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실효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인 수단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연근해 어선의 감축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어업도 그렇고 우리가 폐기물 정화 사업이 중요한데, 특히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이 꽤 중요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부처 간에 이원되어 있는 문제도 있지만 실효적인 예산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해양폐기물의 정화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사이 산불과 관련된 내용이 재난으로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걸 뒷받침하려면 산림헬기가 제대로 도입돼서 운영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하고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악화되다 보니까 예전에 러시아에서 지원받은 산림헬기 이 내용들이 제대로 보수

도 안 되고 정비도 안 되는 한계가 있고,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뒷받침하려면 산림헬기 도입과 관련된 내용도 제대로 점검하고 실효적으로 진화 헬기가 도입되고 임차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영 간사님 말씀하세요.

○허영 위원 여야 예결소위 위원님들의 증액 의견은 당연히 국가 운영의 여러 현안들을 담은 소중한 증액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향후 증액 반영에 대한 부분들을 철실하게 인식하셔서 잘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가 예산 규모가 큰 규모기 때문에 제기된 증액 사안들에 적극적으로 임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여러 언론지상에 감사원이 국회의 예산심의 건에 대해서, 실제로 기재부를 감사한 내용으로 발표를 했지만 감사원의 이러한 심각한 정치감사 행위에 대해서 매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지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감액심사와 증액심사가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마치 그것이 국민들에게 지역균형발전과 또 이렇게 사회 각 분야에 필요한 예산들을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국회의 이러한 절차적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정부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이 마치 불법과 이런 것들이 만연하는 것처럼 보도자료화해서 이 시점에 감사원이 결과를 발표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차원에서 예결위 전체회의가 소집되었을 때 감사원장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정치감사 행위를 자행하는 감사원을 불려서 유감과 사과와 그런 것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적이 있는 것은 우리가 감액심사 과정 속에서 거쳐 왔던 이런 절차적 부분들을 증액심사에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명한 절차적·제도적 개선들을 마련하는 것을 또한 우리의 과제로 두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재부와 정부는 우리 국회 예결위와 협의해서 증액심사를 좀 더 투명하게 제도화하고 개선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의 마지막 증액 제기에 대한 부분들인데 꼼꼼하게 메모를 해서 최대한 위원님들과 중복되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의 증액사업들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소관 사안으로 국선변호사 지원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이후에 월정액 보수체계 도입 이후 계속 동결되어 왔습니다. 국선전담변호사 보수 현실화가 더욱더 필요한데요. 국선변호사에는 일반국선변호사와 국선전담변호사가 있습니다. 국선전담변호사가 사건당 보수액이 평균 약 24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일반국선변호사는 약 55만 원 정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운영비는 거의 개인 비용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여러 가지 보수와 사무실 운영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건의드립니다.

그다음에 국제소송 인력이 있습니다. 구글, 메타, 폭스바겐, 넷플릭스 등 굴지의 글로벌 기업과 소송을 상대해야 되는 그러한 비용인데요. 소 총액이 약 3조 2370억 정도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직접 소송 대응에 대한 지원이 국가 차원에서 부실하기 때문에 글로벌 굴지 기업과의 소송 과정에서 패소하거나, 이것이 다 우리의 국력 낭비 효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충분한 국가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복지부 소관 사안입니다.

간호법 시행 이후에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간호인력지원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간호사들이 퇴직하는 사유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업무 부적응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 간호사나 기존 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들을 충실히 시켜서 간호사가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성과 장기근속과 이직 방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 대한 예산을 충실하게 증액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간호법 시행 이후에 또 의료대란 속에서 간호사가 진료지원을 담당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이 진료지원이 시범사업 시작 이후에 약 61.4%가 증가를 했습니다. 또 이 진료지원 간호사를 위해서 간호협회가 교육을 해야 의사 공백 시에 발생하는 진료지원 분야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또한 국가적 지원들을 간호법에 근거해서 좀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간호사와 더불어서 간호조무사들도 코로나 대응 시기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역할들을 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국가 지원 교육을 받는 간호조무사가 전체 인력의 5% 미만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이러한 교육을 받는 예산을 50% 감액을 했습니다. 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걸 감액을 한 겁니다. 간호조무사들이 전국적으로 10만 명 이상 있는데 이 3억밖에 안 되는 그걸 감액을 해 가지고 교육훈련의 기회들을 없애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거 본예산 정도로 복원해서 꼭 간호조무사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들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가 다양한 교육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단기간 결원이 발생할 시에 사업장에 대체인력을 파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대체인력 지원 예산도 사실상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거의 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대체인력이 지원이 안 되면 이게 바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으로 직결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도 꼭 예년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을 거고.

군 지역, 지역소멸 지역의 병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인력,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도 충실하게 의사와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서 소멸 지역의 의료 공백 사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부와 국방부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약 7000개가량의 오물풍선이 날아왔는데 거기에 GPS를 달아서 이것이 생물학적 테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까지 재네들은 계속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과 국가가 비축하고 있는 두창 백신이나 필수 백신 부분들이 대부분 80% 이상 유효기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증액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특히 군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국가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 관련된 부분들이고 제가 이번 종합정책질의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핵

심적으로 준비했었던 분야입니다.

군 간부들이나 초급간부·중견간부들의 이탈이 우리 군의 안보역량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당직근무비, 간부훈련급식비 그다음에 군은 일반공무원에 비해서 3년간 두 차례 정도 이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무지에서 채 1년에서 1년 반 정도밖에 근무를 안 하고 또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데 그것을 다 자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사화물비 지원, 주거환경개선비 그다음에 단기복무장려금과 단기복무수당, 단기복무장려금은 세금을 안 매기는데 이 부사관들에 관한 수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세금을 매겨서 이게 또 거기에 있어서의 역차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려금과 수당의 세금체계와 장려금의 수당 인상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지금 학군 후보생들 거의 50% 미만으로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전군의 기본급식비가 지금 한 1만 3000원 수준으로 동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좀 현실화하고, 또 질 좋은 급식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급식보조비가 정부안에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여러 가지 지원제도 또 인력 획득을 위한 그런 장려금·수당 문제, 급식 개선 문제에 대해서 여하튼 정부가 기재부가 좀 적극적으로 증액 소요들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2개 사안들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문화체육관광 부서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입니다.

정부가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 대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들이냐면 문화회관 건립,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등 문화시설 확충, 체육진흥시설 지원 등 소관 12개 사업을 지방 이양을 했는데 이 사업 규모가 총 8815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중 36% 이상이 수도권에 이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은 재정자립도가 대부분 80%, 90%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관련된 지방 이양 사업들을 수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 미만입니다. 10%대의 재정자립도를 가진 지자체가 수도룩합니다. 그런데 이 8000억 규모를 거의 대부분 이렇게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인해 가지고, 그러면 지방은 문화체육, 문화 관련된 향유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마찬가지로입니다. 이 정책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지방에 이양했으면 국고보조를 어느 정도 해서 이 사업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체육·문화예술사업 지원 부분들에 엘리트 체육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운동부 지원, 체육중·고등학교 지원, 대학운동부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법정 배분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법정 배분 비율이 그 기금에서 5%, 국민체육진흥계정의 5%까지 해야 되게끔 의무 비율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가 3~4% 수준으로밖에 반영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법정 배분 비율을 지켜서 충분히 지원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지역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이 부분들에 대한 공사비 지원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차원에서 인건비 지원이 어려우면 프로그램 지원을 충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육강사나 초등학교 예술강사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전문성을 교육과 연계해 가지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정부의 기후위기 비상사태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증액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년도에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 4.8조 원 규모였는데 25년도에는 3.8조 원으로 1조 원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국제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부분들과 에너지전환 산업전환이 국제 경쟁력에 가장 우선시되는 기준이고 원전을 비롯해서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되지 않는 반도체나 이런 물품에 대해서 다 탄소세가 부과되고 국경의 시범 차원에 있어서의 다양한 규제가 현실화되고 있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체 건설투자 부분들이 1.2% 정도 줄어들 거라고 하는 전망이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유보금도 있고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재정적 여력이 있지만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 요인에 다가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라든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들은 충분히 증액되어야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2000억 정도 증액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저는 노후화된 어린이집이나 보건소 의료시설까지 확대해서, 이게 이미 평가 결과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린리모델링을 진행한 530동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했는데 한 40% 정도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2만 6800t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한 5000억 정도 증액을 해서 지역 건설투자도 살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린리모델링을 통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국제적 평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데에 필요한 예산이니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개발 R&D 사업 그다음에 산업 일자리 전환을 위한 예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예산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력효율 향상을 위해서 에너지 효율시장 조성 사업이라든지 전기 히트펌프 지원 예산,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 그리고 무공해차 지원 예산 이거 증액하지 않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당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감축하지 말고 이거 어차피 집행률이 한 50% 정도 수준밖에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대당 400만 원을 유지해서 대수를 줄여서라도 집행률도 높이고 수요를 더욱더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증액 효과가 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비용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예산, 협동조합 예산 이런 부분들도 제가 서면으로 추가적인 세부사안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발달장애인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 공히 지적을 했습니다. 주거생활 서비스나 낮 시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낮 시간 서비스 그다음에 자기주도 급여형 일자리 사업 정말 효과가 좋은 사업이니 이 부분들에 대한 증액도 특별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 수고하셨습니다.

허영 간사님이 말씀하신 감사원이 감사 발표를 한 것에 대한 경위와,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과에 대한 것들을 전체위에서 다루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양당 간사가 각 당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증액 부분에 대한 질의는 서면질의로 대체할 텐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서면질의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말씀은 하셨지만 정리가 잘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속기는 다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필요하시면 정리를 잘해 주셔서 오후 2시까지 내 주시면 이후 반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증액심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권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방정부로부터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상임위에서 여러 의견들을 제안받고 나서 정부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구자근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제도 밖에 있는 분들에 대한 예산편성은 들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생계가 하루하루가 바쁘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을 알면서도 그걸 어떻게 표출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또 시도의원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그분들을 만나고 또 계기가 되면 간사님을 만나거나 위원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권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한 반영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하고자 하는, 이번 예결위에 대한 목표는 그동안에 국회법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예산심의 의결시를 넘겨서 심지어 12월 말까지 가고 준예산까지 나오는 이런 것들을 한번 탈피해 보자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액 부분과 증액을 더 벗어나는 것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또 정부가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맞춰 가면서, 일방적으로 감액이 돼야지만 증액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의 감액·증액 부분에 대한 대략적인 규모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 중에서도 다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반영되기를 원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또 어떤 게 더 예산을 쓰는 데 효율성을 갖느냐, 효율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 밖 사각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조금 더 우리가 보충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런 일들을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하신 것과 오늘 말씀하신 것들이 다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오찬을 위해서 정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은 기재부로부터 어제와 오늘 위원님들 증액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의 방향을 듣고, 그리고 저희가 한편 감액 보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감액 보류 사업을 양당 간사님과 제가 리뷰 한번 해 보는 차원에서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4시까지 할 생각입니다, 필요하다면 더 연장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오후 일정은 4시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부터 4시까지는 기재부에서 정리할 시간도 필요하고 또 2시까지 서면으로 여러분들이 리스트 목록 해서 전달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양당 간사님과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속개시간을 뒤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재부 어제 오늘 증액 의견에 대한 대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기재부차관입니다.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엄청난 정신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흔히들 이야기하듯이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숫자로 표현된 정책의 방향이자 의지이자 어떤 정책의 기초라고 하는데요. 여야 위원님들 공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는지 실현 방법과 수단에 대해서 조금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많은 위원님들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장애인, 청년, 한부모가정 아동 등 이런 취약계층 그리고 약자 복지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 양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산어촌 그리고 해양, 지역 SOC에 대한 적기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AI, 바이오, 양자라는 3대 게임체인저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같은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원전, 방산 산업에 대한 수출 지원 그리고 문화 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 AI,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에너지 자원 분야에 대한 투자도 강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군의 초급간부에 대한 처우개선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특정 직종과 관련해서는 국선전담변호사 그리고 간호사, 조무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보건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화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반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저희 정부에서도 그동안 이런 방향으로 정부예산안을 짰고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들을 잘 감안해서 저희가 증액심사 과정에서도 양당 간사님과 잘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사실은 그동안 저희가 증액에서도 지역사업에 대한 증액을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는 관례대로 기재부 쪽에서 각 소위 위원님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님들로 구성이 돼 있고 또 상임위도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소위 위원을 구성하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사업에 대한 것들은 기재부 공무원들과 같이 상의하는 그런 후단의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기재부에서도 위원장실에 오셔서 이런 논의할 때 작년과 비교를

하면서 3회독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렸고 또 유념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평년에 비해서 굉장히 이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기재부 역시도 이것이 제 시간 내에, 기한 내에 예결위 심의를 못 하고 뒤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이번 예결위야말로 예결 심의를 기한 내에 마치는 것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따라서 지금이라도 속히,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의 기본 기초가 중앙정부에서 할 일들을 지방정부로 넘겼는데 다시 또 지방사무 소관의 일들을 중앙정부에서 인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국회라는 데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조해서 빨리 서둘러서, 이런 지역에 대한 민원들 정부가 놓칠 수 있었거든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액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류 사업 감액심사에 관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 말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저와 양 간사님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우리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이곳 소회의실에서 정책펀드, ODA, R&D 그리고 이차보전 사업 등을 포함한 모든 보류된 감액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류 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심사가 종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오해하고 있는 ‘깜깜이 심사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겠지만 저희가 속도를 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심사 진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들을 다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또 의견을 듣고 이런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액심사 방식은 똑같이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시면 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없으시면 기재부의 이런저런 의견들을 듣고 그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리 시간을 좀 많이 드리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들이 끝나는 대로 정회를 다시 하였다가 또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증액심사에 대해서 아까 하지 못하신 말씀들이 있거나 아니면 증액심사가 아니더라도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들은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박정 위원장님 또 양당의 간사님들, 역대 해 보지 않은 길을 가시면서 깜깜이 심사라고 하는 그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지하게 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우리 소위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우리 국민들의 귀에도 또 눈에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내용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언론에 나온 내용 보면 과거 기존 관행대로 해 온 것처럼 그리고 때가 때이니 만큼 ‘아, 이때쯤이면 깜깜이 심사를 하겠거니’ 하고 의례적으로 언론들이 다 그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서 그 내용만 보면 국민들이 여전히 국회가 그냥 몇 사람이 앉아서 주요 결정을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 부분은 한번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내실 있게 진행되고 법정 기일을 준수하려면 이 뒷받침을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따라 줘야 이게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 내용들이 역시 기재부도 예전에 관행대로 해 왔던 그 내용에 익숙해서인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제대로 풀로 업 해 주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위원들이 함께 깜깜이 심사 하지 않고 제대로 심사하겠다는 이런 열정과 의지가 있는 만큼 이런 열정과 의지를 기재부 차원에서, 예산 당국이 잘 뒷받침해 주는 노력이 함께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 다음, 정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내가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 참석하느라고 조금 늦게 왔는데, 한 5분 늦게 왔는데……

하여튼 드릴 말씀은 우리 계수조정소위에서 여러 가지 많은 논의를 해 주시기 위해서 위원장님하고 두 분 간사님 또 위원님들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다만 우리 국민들 그리고 또 언론인, 기자분들 만나면 그 얘기를 하네요, 우리 소위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보류 안건이 엄청나게 많더라. 그리고 ‘증액도 많은 것 같은데 그 보류된 수많은 항목과 증액들은 언제 심의하십니까?’, ‘심의합니다’라고 지금 며칠 남아서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 했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계속 나오는 짬짜미인지 깜깜이인지 뭐 그런 얘기하고 소소위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소소위에서 그 많은 걸 다 결정합니까? 소소위가 아무리 능력 있는 소소위라도 다 못 할 텐데 그러면 예산은 도대체 언제 어디서 누가 의결하는 겁니까? 심의하는 겁니까?’, 굉장히 궁금해하고 의아해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정도는 뭔가 보류된 것도 정리돼서 의결이 되고 증액도 완전히 큰 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의결이 되고 해야 되는데 소위에 기자분들도 들어와 있고 속기록도 보고 하면 진도가 안 나간다. 그런데 날짜는 12월 2일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올해 심의하는 내년 예산도 결국 예년하고 똑같이 그냥 정부안대로 끌려가는 그런 짬짜미, 깜깜이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이 제대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좀 심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아직도 가지고 있고요.

기재부 좀 전에 또 만났습니다. 그런데 시트인가 등등이 금요일 날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볼 수 있는 게. 금요일 오후면 주말이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이

12월 2일 법정시한이고, 그러면 뭐가 감액되는지 증액되는지 우리 계수소위 위원조차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이 결국은 정해지고 그게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을까, 12월 2일이 지켜질 수 있을까 이런 굉장한 의문이 저도 생깁니다. 그래서 뭔가 심의가 제대로 되고 법정시한에 맞춰서 국민들한테 발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큼니다. 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 또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금 늦게 들어오셔서……

그 앞의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R&D, 이차보전, 펀드 또 ODA 사업들에 대해서는 각 당의 위원님들이 같이 그것 검토를 하고 그 의견들을 우리 간사님들한테 전해서 속도감을 내고 또 효율성을 위해서 큰 원칙을 정해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2시부터 4시까지는 그걸 중심으로 기재부와 같이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가 2382개이긴 하지만 여당·야당의 중요 쟁점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리뷰를 해 보고,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리뷰했으면 좋겠는데 법정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리뷰를 한 상태에서 다시 기재부와 또 정부 측의 의견도 들어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면 우리 소위원회에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것들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잠깐, 최형두 위원님 먼저 하시고 허영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혹시나 리마인드로……

지금 언론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대목에서, 국회가 물론 다 잘하지는 않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예결위가 또 국회가 각 상임위에서 정말 치열하게 논쟁하고 예산의 방향 또 예산의 어떤 부분을 삭감할 것인가, 어떤 부분을 증액할 것인가는 지난 근 한 달간 치열한 논쟁을 벌여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언론이라든가 국민들이 약간 궁금하게 생각하는 대목은 수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수치는 증액과 감액을 같이 해야 되고 매우 다양한 가짓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예결위를 통해서 또 소위를 통해서 계속 토론하고 감액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 정정 의견을 내고 하는 과정에서 큰 방향이 속기록으로 남아 있고 그 기록을 통해서 이 수치를 만드는 작업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는 사실 큰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세세한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논의를 바탕으로, 그 속기록을 바탕으로 보류된 것은 보류된 대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위 위원들도, 두 분 간사님께서 특별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예결위, 국회사무처에서도 그 기록을 세세히 뒷받침해서 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부가, 기재부가 그 수치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액하고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 증액해서 그 균형을 맞출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막연히 걱정하시듯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예결소위의 한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저도 약간 걱정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논쟁을 벌이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속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과정에서

상당히 삭감된 부분을 보면 여야의 뚜렷한 입장 차 때문이기는 한데 이것이 일부 절충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정되기도 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가장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북한에서 풍선으로도 보내고 있지만, 오물을 보내고 있지만 접경지역에서는 괴음과 온갖 소음으로 잠을 못 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TRI, 전자기술원에서 그런 북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소음도 역시 음파기 때문에 음파를 다른 전파 기술로 저감시키는 장치 기술 이걸 개발하자는 것에 10억을 넣었는데 감액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액수가 적어서 혹시 눈여겨보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됩니다.

또 하나는 방송심의위원회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 여야의 가장 큰 논쟁거리 중 하나인데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로 인한 큰 논란입니다. 그러면 2인 체제는 어떻게 비릇되었느냐, 2인 체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둘러싸고서,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 초에는 다 정상화될 것으로…… 왜냐하면 탄핵 재판이 어쨌거나 1월 초에는 가든 부든 결말이 나와 될 테고, 그렇게 되면 국회가 3명을 추천을 해야 되고 그러면 5인 체제가 복원이 됩니다. 복원이 되고, 방심위도 그 기능이 다시 완전히 복원이 될 텐데 지금 상당수 예산을 2인 체제를 전제하고 예산을 감액한 게 많습니다. 이것도 감액심사 과정에서 잘, 물론 세세하게 기록돼 있겠지만 수치를 따지는 과정에서 좀 세밀하게 봐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핵심 R&D 예산 부분에는 전체 R&D를 통으로 보고 있으니까 잘 살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에 증액사업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게 지역 사업이 아니고 나라의 운명이 걸린 사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우 기술적인 이야기여서 예결위원님들도 무슨 이야기인지 약간 의아해하실 테고 또 사실은 저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하면서 많은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한 내용을 시간이 허락된다면 한 10분 정도 좀 부연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이 예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소위원장 박정 최형두 위원님, AI에 대해서는 허영 간사님도 종합질의에서 많이 말씀하셨고 또 AI의 중요성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들을 동의한다 이런 건데 전체적인 밸런스에서는 삭감이 있어야지 그 분야에 대한 증액이 있으니까……

○최형두 위원 물론이지요.

○소위원장 박정 그래서 효율성을 위해서 삭감들을 계속해 나갔던 거고 많은 부분에 대한, AI 증액에 대한 것들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하는데 그건 허영 간사님이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하고.

○최형두 위원 그렇습니다.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고 또 허영 간사님이나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예결위 종합질의 과정에서도 강조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동의하는데 AX·DX 그다음에 LAM이라고 하는 초거대 제조 AI 모델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동안 산업화·정보화 이후의 AI 문명 대전환기에 또 기정학의 대충돌기에 국가의 운명이 걸린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이 대목에 대해서는 좀 더 큰 관심과 비중으로써 살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으로 매듭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장 박정 박수민 위원님 하시고 하실래요?

모두말씀에 드렸듯이 우리가 시간을 좀 아껴서, 또 전체적인 예산 책임을 지신 기재부 차관께서 중심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까.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시고 허영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저도 오늘 언론으로부터 예결위 진행에 대해서 접촉도 받고 설명도 요청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도대체 증액은 속기록 그런 것도 없이 맨날 한다고 해서 비난하고 감사원도 지금 의견을 표하고 하는데 소위 차원에서 어쩌냐’ 해서 저는 어제 제가 했던 얘기를 조금 더 압축해서 전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예결소위는, 저희 소위는 정말 제가 볼 때 의미가 있다, 나는 처음 참여했지만, 상임위에서 올라온 그대로는 예산이 편성안보다 좋아졌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예결위 소위를 통해서 우리가 정부 편성안 플러스알파를 했다고 본다. 그래서 그건 잘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공유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결위 전체 차원을 넘어서는 얘기일 겁니다. 제가 보면 국회 와서 제가 첫해니까 그걸 생생히 느끼는데 국회에서 회의하는 방식은 다른 데 어디서 회의하는 방식하고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탄 데서는 논의할 주제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입장을 충분히 개진하고 조금 진전시키든지 하는 식이고 지금 현재의 국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00명이 300명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선순위 정리라든지 어떤 논점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결위에서 정해지지 않은 우선순위와 논점 속에서 예산을 편성해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공유를 드리면서, 제가 그걸 선명히 느끼고.

‘그런데 삼권분립의 구조로 보면, 그래서 행정부가 집행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해 오는 것이고 저희는 직접민주주의 속에서 행정부가 둔감할 수 있는 부분을 심의하는 것이고 이런 기본 역할 분담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아쉬움은 상당히 많다. 정부도 제가 정부안을 볼 때 전략성이나 결기나 이런 것들은 나는 상당히 아쉽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 고쳐 낼 수 있는 정도의 종합적인 의견 수렴이나 토론이 되고 있느냐? 그것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설명해서 그 아쉬움을 저도 공유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이런 와중에 우리 소위는 저는 의미 있게 활동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과격하게 논의됐던 것들 또 상임위에서 놓칠 수 있는 것, 보지 못한 것 충분히 반영했고요. 그래서 소위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고 국회 전체 차원에서는 문제의식이 좀 깊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 감사합니다.

엄태영 위원님, 증액에 대한 말씀 필요하신 거지요?

○엄태영 위원 예.

어제 제가 개괄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증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 기조를 잡고 계실 텐데, 어제 또 차관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시겠다는 말씀 들었는데 그래도 국민건강 증진 관련 예산은 대폭 늘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지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중증 정신질환 관련 예산, 저희 지역도 많다 보니까 다른 위원들도 많이 왔겠습니다만 국회 앞에서 삭발·단식을 하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정신질환 진단·치료 받는 국민이 63만 명에 달합니다. 이걸 우리나라 5100만 중에서 약 1.2%, 그러니까 100명당 1명꼴에 달하는 수치예요. 또 현대사회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이 많이 있고 이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적극 나서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노인빈곤율 1등이고 자살률 1등이고 여러 가지 나쁜 지수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는 간과해서는 안 될 시점에 와 있다 보니까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또 SOC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투자를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정책질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층간소음, 소음 문제 이런 것들이 시비가 돼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실증평가와 체험센터 이런 기반 구축도 예산 증액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요새 한창 문제가 되는 싱크홀 문제, 제가 서울에서 다니다 보면 여의도도 보니까 지금 여의도역 앞에 또 지하철 공사를 하나 추가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땅 밑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뽕 뚫렸을 것 같아. 싱크홀이 아니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한번, 위험률 높은 데는 실체적으로 한번 전체적인 검증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사고후약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미리 미리 이런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부터 여러 가지 안전시설 점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필요합니다. 오히려 예산이 올해 각각 24억, 3억 이렇게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지적을 합니다. 하여튼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SOC 예산이 희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특별히 좀 관심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 허영 간사님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예결소위 이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액 보류된 사업 전 목록을 하나하나 사업별로 다시 심사를 해서 결정할 것은 결정하고 또 보류된 사업들은 다시 기재부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시간을 또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 그 부분들이 전혀 논의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물들을 이 예결소위에서 또 보고를 해서 기록에 남기고 이런 절차적 과정들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논의의 과정이지요. 쟁점이 있는 사항들은 있는 대로 또 이 쟁점 정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몇 명이 만나서 딱딱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보류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의 의견은 어땠는지 또 예결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어떤 건지 이것을 두고 상임위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하면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상임위 감액안을 결정하고 예결위 지적사항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예결위원의 감액 지적사항을 정부가 받아들여서 수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의 목록들을 지금 다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임위도 지난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해당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심의·검토가 있었고 예결위도 전체회의와 소위 과정에서 검토가 있었고 이런 과정이 지난하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밀실 협의를 한다 이렇게 지나치게 비판하는 부분들은 좀 과하다,

투명하게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제도개선 차원에서 사실상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9월 초에 정부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면 지금은 고작 한 달 정도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것의 한 2배 정도를 늘려야 충분한 심사 기간을 가질 수 있는데 정기국회 내에 한 달 정도를 국정감사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국정감사는 5월에서 8월 사이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국회 때에는 온전하게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다양한 법안 처리와 이런 것들을 심사해서 처리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국회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예결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예결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서의 명실상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함께 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야가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정말 간절한 뉴스를 보고 이것은 기재부나 정부에서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어떤 한 아이의 아버님이 전국 국토대장정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겪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아이의 치료비로 쓴 게 46억이라고 합니다. 그 돈을 어떻게 마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간 돈이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지역의 어떤 희귀난치성 아이도 똑같이 주사 한 번 맞고 치료제 한 번 복용하는데 있어서 그 치료제 값이 한 번 투여할 때 1억 원이 넘는,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미성년일 때는 보험 적용이 되는데 아이가 커서는 또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성인이 되면.

이런 제도적 불합리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과 더불어 보험 적용과 이런 희귀난치성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그런 치료 비용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들이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가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고 유전자세포 치료 분야에 있어서도 상당한 기술력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전자세포치료센터, 게놈의 선도적인 그런 기구들을 만들어서 정말 그 분야에 있어서 희귀난치성질환들에 대한 세포 유전자 치료 능력들을 길러 나가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또 다른 희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게끔 자그마한 금액이라도 반영을 해 주셔서 그런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과, 또 산업적인 어떤 기반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꼭 국가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선 위원님.

○김태선 위원 지금 허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아까 46억 원 들어간다는 이게 기록에 남기 때문에, 실제 모금을 한 것은 1억 정도선 넘고요. 미국에서 치료제가 개발됐는데 이게 정확한 병명이 듀센근이영양증이라고 신경계근육 희귀질환인데 46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토대장정을 시작을 한 거고 실제로 지금까지 거둬들인 건 1억 조금 넘게, 그것밖에 안 된다고 해서, 지금 46억을 쓴 것은 아니고요 46억이 앞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라서 그 부분은 수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 최은석 위원님 짧게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다른 건 아니고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 말씀하신 그 세포유전자치료제, 제가 민간에 있을 때 관련된 일을 좀 해 봐서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체계 같은 것을 구축해서 그중에서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중요한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들은 되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민간기업에서 해 보니까 워낙 돈도 많이 들고 국가가 어떻게든 정책적으로 같이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제약업체들의 체급이나 그동안의 기술력 이런 것으로 봐서 개별 기업들이 하게 놔두면 그냥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 어제와 오늘 오전까지 증액심사에 관한 목록들은 우리 예결위 차원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어떤 위원님이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이것은 기재부에 전달을, 기재부 나름대로 또 정리를 했고 속기록에도 남아 있겠지만 전달해 드릴 테니까 반영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엄태영 위원님은 그 이후로 또 증액사업에 대한 발언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또 추가해서 하겠다는 말씀과 질의는 안 하셨지만 서면을 통해서 보내 주신 것까지 정리돼 있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가 정회를 하기 전에 그동안 증액심사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기재부가 말씀하시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위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증액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오전에도 좀 늦게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속도를 좀 빨리 내셔서 기재부 자체에서 증액 시 ‘이것은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또는 ‘거의 시트 작업하는 데까지 하면 빠듯해요’ 이런 얘기를 안 하실 수 있도록 힘드시지만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까 모였을 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장철민 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감사원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제가 보고서 공개분을 죽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에 국회 예산 과정에 대한 완전한 몰이해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 정치 과정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 부추기려는 의도가 들어 있지 않나 싶을 정도의 잘못된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지 아니면 감사원을 직접 불러서 소명을 듣고 조치 방안을 만드실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보도자료랑 기사만 봤을 때는 그 정도 문제의식은 아니었는데 관련 보고서를 죽 읽어 보니까 정말로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정 양당 간사님과 상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회의가 열리는 날 감사원이 이 문제에 대한 해명과, 또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꼭 해야 합니다.

○소위원장 박정 기재부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요. 상임위 그리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가슴에 새기고 심사 과정에서 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시행됐던 2014년, 15년도에 예산실의 정책과장, 총괄과장으로서 사실 원년 멤버였습니다. 그때 예산안이 12월 2일, 그다음 해 2015년도에 2016년 예산안을 할 때는 12월 3일 새벽이라 사실상 12월 2일 날 통과가 돼서 법정기한을 준수했었는데요. 그때 저희 재정 당국에서도 직원들의 만족도가 엄청 높았고 이제 12월 달에 크리스마스를 가족들과 보낼 수 있다고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희 기재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모든 직원들이 상임위, 예결위에 참여해서 여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최대한 올해도 법정시한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같이 있던 국장, 과장들이 일하러 복귀를 했고 저 혼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영 위원 질문 좀 짧게 한마디……

○소위원장 박정 정일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일영 위원 관계되는 직원분들이나 우리 위원님들 다 수고 많으신 건 압니다. 아는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말씀들 많이 하셨지만 결국 결과물로 나타나는 건 내년 예산안 아닙니까, 예산 수치? 그런데 그것을 결국은 금요일 날 오후에 본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정하고 조정하고 협의할 시간도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지나면 12월 2일이요……

예산부수법안도 그렇지만 예산안도 조금 조정하면 부수법안 또 세입세출이 다 맞춰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못 하니까 결국은 12월 2일 법정시한을 지키려면 기재부에서 만든 그 안을 그냥 우리가 또 따라가는 모양이 될까 봐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법정시한에 쫓겨서 또 다시 기재부안대로…… 기재부안이 100%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도 조정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감액, 증액 등등 수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은 볼 시간이 있어야지 세상에 주말에, 금요일 날 오후에 ‘이것이 1차 부분적인 시트안입니다’ 하면 언제 그것을 조정하고 협의합니까? 그동안 얘기한 것 결국 결과물로, 수치로, 예산안으로 나타나야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서둘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정일영 위원님께서……

그동안의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정부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이었다, 그전에는 최종적인 안도 못 보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이런 결과들을 우리 소위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소위가 전체 예결위를 대표해서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리되는 것을 말씀드리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게 수치로 보여 주는 것이지요. 그 시간이라도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국회법의.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박수민 위원님도 계속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 예결위가 끝나고 내년 내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더 우리가 고칠 부분은 고치고 보장할 부분은 보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위한 TF도 꾸릴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민생 회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15인)

곽규택 구자근 김영환 김태선 박수민 박 정 안도걸 엄태영 윤준병 장경태
장철민 정일영 최은석 최형두 허 영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원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전문위원 정대영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윤상
예산총괄심의관 유병서